

모바일 투표 도입 계파간 신경전

민주 전대 지도부 경선률 어떻게

전대선 '효험' 총선에선 '부작용' 속출

일반 당원 참여 폭 확대도 '갑론을박'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 룰'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당권의 향배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별씨부터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는 전당대회에서의 당 대표 경선 방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한 경선 시행세칙으로 '당원·시민선거인단 모바일투표, 당원·시민선거인단 투표소 투표 및 대의원 선거인단 현장 투표로 실시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지난 1·15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경선은 '대의원 30%+당원·대의원 70%'의 룰에 따라 치러졌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번 6·9 전당대회에서의 모바일 투표 도입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4·11 총선에 모바일 투표 문제점과 각종 부작용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6월 전당대회에는 도입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은 박지원 최고위원은 23일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6월 전당대회에서는 시민과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총선과 달리 전당대회는 사실상 전국적 선거

라는 점에서 모바일 투표의 폐해가 적다면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내 주류층에서는 모바일 투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를 반영하듯, 윤호중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의 오

찬간담회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

지만) 당원과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모바일 전당대회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로 올라오는 당원과 대의원들

에게 차비 및 식비를 지급하는 문제점

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고 일반 당원

과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당원들의 참여 폭을 넓히는 것도 논란거리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의 존립 근거와 정체성 확립 등을 위

해 일반 당원의 참여가 최소한 30%

수준은 돼야한다는 주장은 내놓고 있

다. 여기에 국민 참여를 30~40% 정

도 배려한다면 적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당원이 없는 민주

통합당 내부 시민사회 진영과 당내 조

직보다는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의 반발이 거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내 갈등 없이 경선 룰을 정하는 것도 민주통합당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총선 폐쇄에 이어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놓고 내부적 갈등 양상이 벌어진다면 12월 대선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경선 룰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이 보다 지혜롭게 경선 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오른쪽)과 박지원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원내대표 후보군 7~8명 압축

이낙연·박기춘·전병헌·신계륜·박영선·신학용·김재윤·노영민 등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군이 압축되면서 경쟁구도가 드러나고 있다. 23일 현재 출마가 접두지는 후보는 7~8명 정도, 당초 15명까지 거론되다가 교통정리가 됐다. 이날까지 출마를 신언한 후보는 이낙연·박기춘·전병헌 의원 등 3명이다.

김재윤 의원은 23일 원내대표로 당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재윤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3위로 15명 중 1위로 선출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노영민 의원은 23일 원내대표로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춘 의원은 23일 원내대표로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